

현대차그룹, 中 ‘제 2의 도약’ 시동 아이오닉 필두 친환경 브랜드 혁신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아이오닉 브랜드 양산 모델 공개
에너지분야 등 中 현지 협력 확대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진출한 지 24년 만에 현지 시장에서 ‘제 2의 도약’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가성비 높은 내연기관차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기차(EV)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로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다. 2002년 10월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50대 50 합자법인 ‘베이징현대’를 설립한 이후, 현대차그룹이 현지에 선보이는 가장 큰 변화다. 친환경차 브랜드 전환을 공식 발표하는 첫 무대는 베이징 모터쇼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오토차이나 2026)’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중국 양산모델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신에너지차(내연기관을 대신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 NEV) 브랜드로의 전환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하는 아이오닉 신차는 지난 10년 간 중국 자동차 시장 조사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다. 단순히 EV를 출시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지 IT기업 ‘모멘타(Momenta)’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차그룹은 중국 현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CATL과 시노펙, 위에다그룹 등 배터리-에너지-자동차분야 주요기업과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터리 기업 CATL과는 CTP(Cell-to-Pack)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에너지 기업 ‘시노펙’과는 광저우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법인 ‘HTWO 광저우’를 거점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기아의 현지 합작기업 위에다그룹과도 완성차 판매를 넘어 배터리와 수소, 미래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16년 중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베이징현대 6.5%, 동평위에다기아 3.7%)을 기록하며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과 ‘빅 3’로 불렸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이후 기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서울 25개 자치구 전셋값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약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23일 서울 한 부동산 계시판에 매매, 전세, 월세 등의 매물이 적혀있다.

/뉴시스

LPG·부탄 유류세 할인율 15%p 인상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의 할인율을 현행 대비 15%포인트(p) 올린다.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에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폭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휘발유·경유에 이어,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L)당 31원 내릴 전망이다.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적용된다.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

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휘발유(7→15%)와 경유(10→25%)에 대한 인하 조치를 확대·연장(5월 31일까지)한 데 이어 이날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LPG 국제 가격 변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톤(t)당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은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로, 부탄은 540달러에서 800달러로 각각 크게 뛰었다.

인하 조처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뒤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와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etro

국민권익위원회 ‘땅꺼짐 사고’ 보상 확대

공적보험 통한 보상 수준 개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공적 보증을 통한 보상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현행 공적 보험 보장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했다.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는 영조물배상보험 내에 땅꺼짐 사망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 한도를 높이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etro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 4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4차 최고가격, 수요관리 측면 고려
산업부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안해”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인하여 인하 요인이 있으나,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남경도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4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관련해 남보좌관은 “최근 2주간 국제 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여서 인하 여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의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률만 반영하면 4차는 3차 대비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시 국제석유 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남보좌관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주 단위 평균 국제 제품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로 각각 하락했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4.66%다.

다만, 최고가격제에 따른 주유소 판매가격은 시장 자율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했다면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내외, 경유는 2700~2800원, 등유 2500원 내외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남보좌관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 상황이라 최고가격제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중동 분쟁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 시행 이후 4주간 동결된 상황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인상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봤다. 다만, 현재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차이가 리터당 100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결 조치로 인해 향후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반복담합’ 경제적 제재 대폭 강화

영업권 박탈 등 시장참여 엄격 제한

최근 설탕, 인쇄용지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짬짜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반복적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징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5년 이내 재범 시 혜택을 박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절반(1순위 면제→50% 감경 등)으로 축소한다. 특히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영업권

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강화된다. 현행은 입찰담합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약하는데, 비입찰 방식의 가격·생산량 담합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도도 개선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 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보완 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metro

/세종=한용수 기자